

나주 혁신도시 '효과' 지방세 2배 이상 늘어

지난해 359억...올 800억 전망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효과'로 전남도와 나주시의 올해 지방세수가 지난해의 2배인 8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전공공기관의 사업이 계속되고, 전입 인구가 1만명을 넘어설 경우 2016년에는 지방세 징수규모가 1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전남도와 나주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빛가람혁신도시에서 걷은 도세는 358억원, 나주 시세는 51억원 등 모두 41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도세에서는 취득세(318억원), 지방교육세(29억원), 등록면허세(10억원), 시세는 지방소득세(39억원), 주민세(8억2000만원), 자동차세(3억4000만원) 등이 주로 걷혔다.

지난해 1년간 혁신도시에서 도세는 336억원, 시세는 22억원 등 모두 359억원이 납부됐다. 올 하반기에도 혁신도시에서 상반기와 같은 액수만큼 도세와 시세가 걷힐 것으로 추산하면 지난해에 비해 지방세는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빛가람혁신도시 전입인구가 지난달 말 9000명을 넘어선데 올 연말이면 1만 3000명에 달할 전망이다. 취득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은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 감면 정책에 불구하고 빛가람혁신도시가 순조롭게

정착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지방세를 전남도와 나주시에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13개 이전공공기관들은 지난해 9억 7900만원의 지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관이 사업을 맡거나 신규 시설을 설치할 경우 재산이 증가하면서 지방세 규모도 자연히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전남도의 분석이다.

전남발전연구원은 지난 5월 빛가람혁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지방세 감면 정책에 따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95억2800만원(취득세 285억9800만원·재산세 9억3000만원)의 세수 결손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58억7000만원(취득세 44억4700만원·재산세 13억6000만원) 등 2022년까지는 300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나주시가 빛가람혁신도시 관리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연평균 162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공동발전기금 조성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나주시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세로 혁신도시가 안정될 경우 지방세(도세+시세) 징수 규모가 1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며 "인구의 전입과 함께 신규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기를 띠게 되면 지방세도 덩달아 늘어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나주=손영철기자 ycsn@

광주시민 복지기준 '최소한의 삶→인간다운 삶'



"찬성합니다" 10일 오후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시민 500여명이 참가한 '시민과 함께 만드는 광주시민 복지기준 500인 원탁토론회'가 열렸다. 광주시민 복지기준은 시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 가이드라인으로 소득, 주거, 돌봄, 교육, 건강 등 5대 분야에서 국가가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10대에서 70대까지 시민 500여명 참여 '원탁토론회' 개최

소득·주거·돌봄·교육·건강 5대 분야 73개 실행과제 선정

광주시가 500명의 시민들과 함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광주시민복지기준의 9대 영역별 우선과제를 선정했다. 시는 다음달 7일 광주시민복지기준안(사업)을 비롯한 예산 마련 계획 등을 최종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광주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

회는 10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시민복지기준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위해 '시민과 함께 만드는 광주시민 복지기준 500인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500인 원탁토론회에는 광주시민복지기준안에 대해 10대부터 7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시민 500명이 참여했으며 소득, 주거, 돌봄, 교육, 건강 등 5대 분야 9대 영역 73개 실행과제에 대해 영역별 우선과제를 선정했다.

광주시민복지기준은 국가가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 수준에 더해 '최소한의 삶'에서 '인간다운 삶'으로 한 단계 높은 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영역별 우선과제는 ▲자활사업 참여자

단계적 사회적 일자리 제공(소득 영역) ▲임대주택 보급 활성화 사업(주거 영역) ▲학교폭력 없는 학교 안전망 구축(교육 영역) ▲공공보건 강화를 위한 보건소 기능 확대(건강 영역)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전문성·인성 강화(영유아 영역) ▲어린이아동에 적합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어린이·청소년 영역)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노인 영역)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장애인 영역) ▲초기 입학 이주여성의 다문화 가정지원센터 연계 활성화(다문화 영역) 등이다.

시는 이날 선정된 우선 과제를 기준으로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새정치, 의원 수 300명 유지·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선거제도 개편 문제와 관련,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의 300명으로 유지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했다.

〈관련기사 4면〉

이와함께 자신의 선거공약을 지키지 않거나 지방선거·대선 때 자당 후보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 공천 심사시 불이익을 주는 공천 혁신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 총회를 열어 난상토론 끝에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 현재처럼 300명으로 고정시킨 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또 문재인 대표가 새누리당에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 프라이머리, 선거구획정 등 3개 쟁점의 일괄타결안 역시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하고 새누리당과 협상에 임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정수 확대 없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추진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며 당 소속 의원들에게 당론으로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폭염 꺾는 장대비... "불볕더위 안녕"

광주·전남 30~70mm 예보

폭염기세가 크게 꺾일 전망이다.

광주지방 기상청은 10일 오후 6시를 기해 광주·전남지역에 발효된 폭염특보를 모두 해제했다. 폭염특보 발효 13일 만이다.

또 11일 광주·전남지역에 장대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1일 광주·전남지역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동·번개를 동반한 30mm~70mm 가량의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다"고 10일 밝혔다.

아침 최저기온은 22도~25도, 낮최고기온은 27도~30도 분포를 보이겠다. 이

는 전남보다 4~5도 가량 낮은 기온이다.

이번 비는 오는 12일 오전까지 이어진 뒤 그칠 전망이다. 비가 그친 뒤엔 30도를 훨씬 웃도는 무더위는 없을 것이라고 기상청은 내다봤다.

한편 10일 광양 낮 최고기온이 35.6도를 기록하는 등 광주·전남지역에 무더위가 13일째 이어지면서 폭염피해가 잇따랐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열사병(28명)·열탈진(38명)·열경련(6명)·실신(2명) 등 온열질환자는 모두 74명. 폐사된 가축 수는 닭(37만4278마리)·오리(4만3077마리)·돼지(130마리) 등 41만7485마리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학교설립 61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시간을 거슬러
눈부시게 빛나는 길
헤라 에이지 리버스 쿠션

시간을 거슬러는 빛을 가져와요
피부에 닿을 때마다 빛이 반짝이게
속에서 어린 피부를 되살려주는 에이지 리버스 쿠션.
눈부신 빛과 젊음 그 모든 것을 갖고 더 눈부시게

HERA